

비판사회학 소식지

풍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또 하나의 분기점을 지나며



■ 황현일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장/창원대)

매번이 위기였다. 대학교에 입학하니 학생운동이 위기였고, 졸업하니 노동운동이 위기였다. 대학원에 들어가니 인문사회과학이 위기였고, 학위를 마친 뒤 창원에 자리 잡고 보니 산업도시와 지방대학이 위기였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위기 담론을 접했고, 실제로 위기 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가 어느새 관성이 되어버려 웬만한 위기에는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애써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봄에는 사뭇 달랐다. 한국사회가 이제 절멸의 시간에 들어서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강렬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3월에 발생한 의성발 경북 산불이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기후 사건은 이미 너무 자주 접하고 있지만, 그때 화마가 보여준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둘째, 4월 3일 미국의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하듯이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전으로 그러니까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들었다. 마지막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내전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항상 전환의 시기였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는 2025년 현재가 대전환의 시대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2025년 비판사회학회 또한 위기 의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지난 해 학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콜로키움을 열어 학회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 패널들은 비판사회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학회의 제도화와 안정화가 가져온 비판적 정신의 퇴색, 학계 바깥과의 소통 약화, 지역과 여성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 소수의 헌신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 등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논의에는 학회가 처한 모종의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비판사회학회를 보다 비판적인 학회로 만들기 위한 무거운 과제를 안고서 출범한 2025년 집행부도 어느새 반 년을 지나고 있다.

(다음 면 계속)

2025년 비판사회학회는 비판 패러다임의 활발한 교류와 분과 체계 정립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여기에 12·3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학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던져 주었다. 내란의 사회적 기반, 극우 세력의 대두, 87년 체제의 향후 전망, 청년 세대의 문제, 광장이 보여준 희망과 미래로의 연결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회적 이슈와 쟁점이 쏟아져 나왔다. 비판사회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메인 세션에서 내란과 시민저항을 다루었고, 앞으로도 7월 콜로키움, 8월 하계학술대회, 11월 비판사회학대회에서도 현재의 정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다. 이런 사업과 활동이 비판사회학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풀기에는 부족하겠지만, 학술적 토론과 고민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더 날카롭게 짚어내고, 새로운 질문들과 비판적 연구들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얼떨결에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다. 사실 지금껏 비판사회학회든 다른 학회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옆에서 보았을 때, 비판사회학회는 무척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40년이란 역사가 주는 무게도 컸다. 운영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주변에서 건네는 안쓰러운(?) 시선은 더 큰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여기에는 학회원들이 비판사회학회에 보내는 기대와 지지가 힘이 되었다. 학회원들 사이에는 비판사회학회에 대한 모종의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회원들이 많다. 이는 지난 역사를 통해 비판사회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귀중한 성과가 아닐까 싶다. 덕분에 학회 운영도 전임 임원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관행을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항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운영위원진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중요한 학술 행사가 많다. 분과 체계도 새롭게 만들고 하고 있지만 잘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도 지금껏 그래왔듯 학회가 만들어 놓은 역사와 학회원들을 믿고, 임원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하반기를 맞이하고자 한다.

(끝)

잠겨버린 혁신: 201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생산방식 전환과 다차원적 복합 도전

■ 양승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공학박사, 과학기술학 및 혁신연구 전공) 2025년 8월 예정

2010년대 한국 조선산업은 해양플랜트와 디지털화라는 생산방식 전환에 직면했으나, 1990년대 선박 건조 성공 경험을 둔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잠겨버린 혁신' 상태에 봉착했고 막대한 손실에 직면한다. 본 논문은 이 잠김 현상이 기술-조직-영토 차원의 다차원적 복합 도전이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밝히기 위해, 정량 및 정성 분석을 통해 과거의 핵심 역량이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핵심 경직성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이 전환 과정의 구체적인 실패 양상을 보여준다. (1)스마트 조선소 도입은 기술과 현장 노동 프로세스 간의 충돌을, (2)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복합 시스템을 관리할 인터페이싱 역량의 부재를, (3)동남권 지역은 '산업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제약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생산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넘어, 이 세 가지 차원의 잠김을 해소하는 통합적 조직 역량과 공간적 분업 구조에 대한 재고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춘계학술대회

2025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논하다

2025. 4. 18.(금) 10:00~18:3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 104호, 109호, 307호

주최·주관 비판사회학회, 동아대학교 융합지식사회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국립장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09:30-10:00(30분) 등록
10:00-12:00(120분)
1세션(자막) 104호 사회: 유원근(부산대)
경남지역 '괜찮은 일자리'의 변화와 결정 요인 발표 황현일, 박소현(상원대) 토론자 김보배(강남여성가족재단)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이항애(경성대) 토론자 최민석(경성대)
한국적 연지니어 노동의 재정의: 조선소 해양플랜트 연지니어링의 경우 발표 양승훈(경남대) 토론자 신원철(부산대)
2세션(영어) 109호 사회: 오상용(부경대)
사회경제적 자위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유년기와 성인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남정우(고려대) 토론자 정현일(부산연구원)
'귀어 민주주의': 탄핵 집회와 커밍아웃의 정치학 발표 정성호, 조소연, 이나영(중앙대) 토론자 이성형(부산대)
한국사회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시간성과 정치주체로서의 여성 발표 윤보라(경희대) 토론자 김종훈(서울대)
3세션(국기) 307호 사회: 박찬홍(충남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장차: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심으로 발표 노중기(연신대) 토론자 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 발표 황진태(동국대) 토론자 박해균(서울대)
니콜라스 루만의 마르크스주의적 활용: 사회구성체에 대한 전략관계적 접근 발표 박지훈(부경대) 토론자 지주형(경남대)
12:00-13:00(60분) 점심식사(부경대학교 라일락 교직원 식당, 미래관 3층)
13:00-13:15(15분) 개회식 이항우(비판사회학회장)
13:30-15:30(120분)
4세션(국기) 104호 사회: 조효래(청원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구조: 내란 이후의 시민정치 전략 발표 홍성태(상원대) 자유 토론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퇴행: 12.3 비상계엄과 국가체제 발표 지주형(경남대) 자유 토론

광장에서 만난 세계: 음식업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발표 유희미(상원대), 김정환(한양대), 김이선(연세대), 장진범(충북대), 박성운(충북대) 자유 토론
15:30-15:45(15분) 휴식
15:45-17:45(120분)
5세션(일본) 104호 사회: 황현일(한양대)
포퓰리즘은 어떻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가? 인지-조직 자원 동원과 의대 정원 증원의 정치 발표 류기락(한국적능력개발연구원), 권원재(STELA) 토론자 김주현(동아대)
정동 경제론과 브렌드 가치 발표 이항우(충북대) 토론자 김원태(충남대)
어떤 노동의 산업재해: 경험을 통한 유형 분석과 정책적 함의 발표 김혜민(부산대) 토론자 박성운(충북대)
6세션(정치) 109호 사회: 이정연(연세대)
진보정당 지지의 계급적 기반 분석, 2003-2023 발표 유원근(부산대) 토론자 홍성태(상원대)
민주주의가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경순규(부산대) 토론자 김이선(연세대)
대도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으로 살펴본 공론장의 취약성 발표 천용갑(경북대) 토론자 권오용(충남대)
7세션(국기) 307호 사회: 노중기(연신대)
강남화에 대한 국가공간론적 해석 발표 박해균(서울대) 토론자 황진태(동국대)
전략관계적 접근의 재조명: 자본주의 국가의 패러독스와 딜레마 발표 지주형(경남대) 토론자 박지훈(부경대)
국가와 미디어: 한국 미디어 체계를 중심으로 발표 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토론자 김성윤(동아대)
18:00-18:15(15분) 연구자 공제회 설명회: 연구자 공제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해균(차시공유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장)
18:15-18:25(10분) 폐회사 이항우(비판사회학회장)
18:40 저녁식사

비판사회학회 | sansahak1984@gmail.com | www.criso.or.kr

춘계학술대회: 참관기

■ 박찬중(충남대)

4월 18일 금요일 부경대학교에서 <지역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지역, 젠더, 국가1, 국가2, 정치, 일반, 기획)의 21개 연구로 구성되어 예년 춘계대회와 비교하여 더 큰 규모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느낌으로는 참석인원수도 과거에 비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 같은 열기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주제가 ‘민주주의’인 만큼, 작년 12월 3일의 내란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세션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주제는 이번 내란과 시민저항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획세션의 발표들이었다. 첫 번째 발표인 홍성태(창원대)의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구조: 내란 이후의 시민정치 전략”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개인의 비이성적 충동에 의한 우발성보다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이전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던 추세에 주목하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배경 하에서 사익이나 특수 이익의 압력에 취약한 정치인들이 정당제도를 잠식하고, 상대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제도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홍성태는 12·3 비상계엄을 실패로 되돌린 시민들의 저항과 이후에 이어진 ‘광장의 정치’가 보여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부른 희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12·3 이후 오히려 극단화된 방식으로 나타났던 ‘동원된 민주주의’의 지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탈공고화가 진행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당조직과 선거제도의 개혁 및 권력구조의 분산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내진설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 발표는 『경제와사회』 최신희에 게재되었다).

두 번째 발표인 지주형(경남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퇴행: 12·3 비상계엄과 국가체제”는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권위주의화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이번 사태를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주도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침체와 헤게모니 위기라는 조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고 헤게모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국가’ 상태에서부터,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고 헤게모니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예외국가’ 상태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의 이유는 자본주의의 장기침체에 따라 더 이상 헤게모니적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물질적·상징적 자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행정적·물리적 강제력을 활용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면 계속)

춘계학술대회: 참관기

지주형은 12·3 사태를 이러한 세계적 경향 속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그 세계사적 의미 또한 강조했다. 요컨대 한국의 시민들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았던 것은 결국 전세계적인 권위주의화가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의 전투에서 ‘작게나마’ 승리했음을 의미하며,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권위주의화의 세계적 물결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인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은 유현미(창원대), 김정환(한림대), 김이선(연세대), 장진범(충북대), 박상은(충북대)의 공동연구였다. 이 연구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수합된 발언문과 현장발언 녹취록 1,075개를 바탕으로 집회의 참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9개의 토픽을 추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하여 2024-25년의 광장이 보여주었던 독특성은 소수자들의 참여와 주체성이 전면화되었고 소수자간의 연대가 강조되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발언자들의 요구가 단순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진전’시키는 데까지(‘노동있는 민주주의’) 나아갔다는 점도 2017년과 대비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발표를 맡았던 유현미와 김이선은 ‘광장의 언어’들이 통상 오해되듯이 정치적 고관여층의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제도정치적 공간에서 묵살되거나 억압되어왔던 이들의 목소리이며 단순히 계엄에 국한되는 이야기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광장발언문의 기록은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담론의 ‘준거점’이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로 진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발표는 『경제와사회』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지정토론자 없이 바로 이어진 공개토론에서는 이번 계엄의 원인이 87년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닌지, 왜 대학은 더 이상 저항의 중심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시위참여자들의 다수가 2030 여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다수가 기다려왔던 윤석열 탄핵선고가 이루어진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기쁨과 기대보다는 어떤 긴장감과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추측하건대, 그것은 2016년의 광장과 탄핵이라는 환희가 더 큰 환멸과 실망으로 귀결되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때문이 아닌가 한다. 비록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장의 목소리는 또다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될 싸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끝)

제40회 콜로키움 홍보

제40회 비판사회학회 콜로키움

대선 평가와
진보정치 미래

2025년 7월 7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민주노총 16층 중회의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 줌으로 중계 예정 -

비판사회학회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와 여섯 분의 사회과학자를 모시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정치현장에서 체득한 실천적 지혜와 학계의 이론적 성찰이 상호교차할 본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기조 발제 및 핵심 대담
권영국
민주노동당 21대 대선 후보



패널1: 보수/지역정치
김윤철
경희대학교



패널2: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당
정태석
전북대학교



패널3: 여성, 청년
최나현
부산대학교



패널4: 산업, 노동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패널5: 국제정세
이유철
서울대학교



패널6: 개헌, 사회개혁
지주형
경남대학교

참가신청

<https://forms.gle/At9jGKzWjHRTCKek8>

행사문의

sansahak84@gmail.com

참가신청 (QR코드)



비판사회학교

<2025 비판사회학교>가 열립니다!

2025
비판사회학교
수강생 모집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연구자 모임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학문적 발전을 돕고자, 여름방학 동안 <2025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생각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 있다면 참여 환영합니다.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연구자 모임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학문적 발전을 돕고자, 여름방학 동안 <2025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생각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 있다면 참여 환영합니다.

개설과목

2개 과목 개설 / 강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① 정치와 민주주의 (4강)
- ②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5강)

운영기간

7월 14일 ~ 7월 24일

수강료

정치와 민주주의(6만원),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7만원) (수강신청은 과목별로 가능)

신청기간

6월 23일 ~ 7월 6일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 링크](#)

학회계좌로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이 완료됨. 신청완료 후 이메일 개별 통지

신청 확정 공지를 받은 뒤 수강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 비판사회학회)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비판사회학교> 강의 일정

2025 비판사회학교 수강안내

개설 과목 2개 과목 개설 ①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5강) ② 정치와 민주주의 (4강)	기간 7월 14일(월) ~ 7월 24일(목) 모든 강좌는 14:00-16:30 수강신청 기간 6월 23일(월) ~ 7월 6일(일)
수강료 - 정치와 민주주의: 6만원 -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7만원 - 2개 과목 함께 수강 시 비판사회학회 회원 자격 2년 부여 - 수강 신청은 과목별로 가능 -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능	수강신청 방법 - 아래 구글폼 통해 신청 https://forms.gle/T9Lpser2MhazjyEM6 - 수강료 납부 후 개별 공지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정치와 민주주의

담우의 정의와 이론, 국내외 현황 <small>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small>	7/21(월)
현대 국가 분석: 전략관계적 접근법 <small>지우형 (경남대 사회학과)</small>	7/22(화)
정당: 기원, 이론, 그리고 한국의 사례 <small>박상훈 (전 정치발전소 학교장 / 국회의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small>	7/23(수)
포퓰리즘의 이론적 지형과 현실적 맥락 <small>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small>	7/24(목)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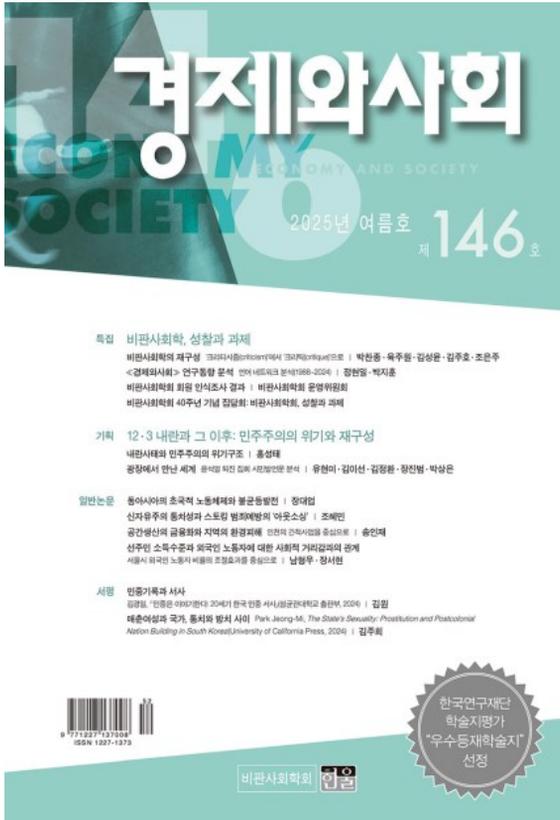
공간과 도시의 사회학 - 인간, 사물, 자연의 섞임과 생성 <small>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small>	7/14(월)
지역과 커뮤니티 <small>윤여일 (경상국립대 사회학과)</small>	7/15(화)
지역과 국가공간 <small>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small>	7/16(수)
지역사회운동 <small>이해연 (충북대 사회학과)</small>	7/17(목)
산업공간의 재편과 지역 <small>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small>	7/18(금)



2025 하계 학술대회

<h1>비판사회학회</h1> <h2>2025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공모</h2>	<h3>공모부문</h3> <p>연구논문 (자유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표 논문에 한함 • 대학원생 공동연구 가능 • 조사 및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초고도 신청 가능
<h3>일시 및 장소</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8월 13일(수)-14일(목) • 충북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장소 추후 공지 	<h3>신청자격</h3> <p>비판사회학회의 하계 학술대회는 대학원생이 발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발표 신청 자격은 대학원생으로 제한됩니다.</p>
<h3>취지</h3> <p>비판적 사회과학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원생들에게 선배 연구자들 및 동료 대학원생들과 학문적 관심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h3>공모일정</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제출: 5월 23일(금)-6월 6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파일 확인 • 발표자 선정: 6월 30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학회 홈페이지 공고 • 발표문 제출: 8월 3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사회> 원고 작성요령 참고
<h3>참고사항</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2일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세션으로 기획 콜로키움 포함 • 발표자에 한해 교통 실비 및 숙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이동에 한함 • 참가비: 3만원 	<h3>제출 및 문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sahak1984@gmail.com

〈경제와사회〉 146호(6월 발간) 목차



■ 특집: 비판사회학, 성찰과 과제

비판사회학의 재구성: '크리티시즘(criticism)에서 '크리틱'(critique)'으로
박찬중·육주원·김성윤·김주호·조은주

〈경제와 사회〉 연구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1988-2024)
정현일·박지훈

비판사회학회 회원 인식조사 결과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비판사회학회 40주년 기념 집담회: 비판사회학회, 성찰과 과제

■ 기획: 12·3 내란과 그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재구성

내란사태와 민주주의의 위기구조
홍성태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유현미·김이선·김정환·장진범·박상은

■ 일반논문

동아시아의 초국적 노동체제와 불균등발전
장대엽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스톡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조혜민

공간생산의 금융화와 지역의 환경피해: 인천의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송인재

선주민 소득수준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 서울
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남형우·장서현

■ 서평

민중기록과 서사: 김경일, 『민중은 이야기한다: 20세기 한국 민중 서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4)
김원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46호(2025년 여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와사회〉 146호 머리말

새 정부의 출범과 과제: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 지주형 (편집위원장/경남대)

지난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역대 대선 최다 득표(약 1729만 표, 49.4%)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리했으나,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41.1%)와 이준석(8.3%) 후보 등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들의 표를 합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대와 달리 ‘압도적 승리’도 ‘압도적 패배’도 없었던 셈이다. 이는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표가 반대 진영에 몰렸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정부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 양극화와 진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 또는 ‘국민주권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사받고 있는 이들 외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국무회의, 검찰, 군 등에서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권력기관과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내란 극복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예: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서,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 및 위헌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도 필요하다.

동시에 새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진영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인해 협치와 중간지대가 사라졌으며, 12·3 내란은 이러한 상황을 ‘전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욱더 악화시켜 버렸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극우 정치세력의 확대와 소외 집단의 분노는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야외집회를 통해서도 부정선거론, 반페미니즘, 극단적 반중정서와 혐오정서 등 극우 성향이 표출되었고, 특히 서울서부 지방법원 습격은 그 정점을 이루었다. 또한 이에 맞추어 국민의힘도 2016년과 달리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대선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20대 남성의 극우와 보수에 대한 지지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보수 진영의 득표가 이재명보다 4.39%p 앞섰다.

(다음 면 계속)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면서 극우 세력에 동조할 수 있는 소외 집단을 민주주의 제도의 정치적 주체로 통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지 않고, 국가 안에 대표하고 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 분석에 따르면 청년과 관련된 법안 중 가결된 사안은 전체의 2.45%로 전체 법안 가결률인 5.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 정치인의 진출이 미흡하고, 정당이 청년 엘리트를 충원하는 데 소홀한 점도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청년’이란 청년 중에서도 주로 물질적으로 취약한 노동계급과 미래가 불안한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대남’도 ‘여성’도 ‘장애인’도 그리고 그 밖의 소수자들도 그러한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기존에 잘 대표해 왔던 중산층뿐만 아니라 이들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들을 포용하고 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때에만 정치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 양극화와 불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별과 삶의 불안을 축소하고 일상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이다. 피부로 느끼는 일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혐오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에 흔들리는 중산층의 고민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국제적 위기, 세수 부족과 국가 부채 증가 등 현재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불평등, 불안정 노동, 복지, 교육, 의료, 주거, 저출생, 생태·기후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노동·복지·사회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그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정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매우 높은 공약 달성률을 보여주리라는 것도 그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경력으로부터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이 앞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간단히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첫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주가 상승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은 총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주식으로 투자를 유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 감소와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주가치 극대화는 산업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감축을 위해 정리하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과 충돌하면서 도리어 강화된다. 산업혁신이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서 산업 생산성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면 계속)

또한 금융소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주가지수가 5000으로 상승한다면 그로부터 이익을 보는 청년과 중산층도 생기지만, 반대로 투자 여력이 없거나 해고 대상이 되어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가 상승은 저성장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며, 정책의 우선성은 산업과 노동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보수 및 실용주의 노선이 노동 및 사회정책에서의 개혁을 퇴색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부분적으로 이 우려는 앞서서도 말했듯 이 이재명 정부가 주가 상승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근로소득보다 우선시한다거나, 나아가 그것을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보장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더 큰 문제는 애초에 사회정책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과 비전에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빈약해 보인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실망스럽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나 부산을 기후위기 시대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은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의 대표산업과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5극 3특' 초광역 정책이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대학 정책을 산업발전이나 지방발전 정책의 틀에서만 사고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일례로 위기에 빠진 순수 기초 학문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 창출과의 직접 관련성이 낮은 이러한 지식일수록 공동체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지식 인프라로서 국가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정책에 있어 국가는 기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의의는 기업이 사회에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물론 12·3 내란의 교훈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국가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정권 초기의 민생 우선 정책으로 개혁의 속도가 다소 늦추어질지라도 검찰과 경제부처 권력과 국가 안팎의 기득권 카르텔 해체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국가개혁은 이러한 부분적 개혁이 아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으로 표출된 정치위기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민의를 왜곡되게 대표하고, 입법부보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을 과도하게 배분하는 87년 체제에 내재한 정치적 불안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87+97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안정된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 의석 증원을 포함한 대표제의 근본적 개혁과, 입법부와 사회권 강화를 포함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의지가 확고할지라도 개혁의 방법론, 시기, 구상 등은 아직까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소선거제의 수혜자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가개혁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면 계속)

이재명 정부는 권위주의화를 넘어 전체주의화 또는 파시즘화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탄생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잡은 개혁의 기회는 소중하고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어떤 정부에게도 비판과 우려는 성가시거나 억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준비된 정부는 없고, 모든 정책은 딜레마 또는 반대 측면이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렇다면 모든 정부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과 우려를 항상 귀담아듣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각종 우려가 결국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부에도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동안 실패한 정부를 너무 많이 겪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개척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 성공한 정부에 목마른 국민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호 특집은 ‘비판사회학,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네 편의 글을 실었다. **박찬종·육주원·김성윤·김주호·조은주**의 「비판사회학의 재구성: ‘크리티시즘(criticism)’에서 ‘크리틱(critique)’으로」는 오늘날 한국의 비판사회학이 처해 있는 위기와 재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저자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학술장 내·외부의 변화와 함께 비판사회학이 전문사회학이나 정책사회학과 구분되지 않은 채 비판성과 공공성을 점차 상실해 왔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성의 재생과 집합적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비판의 창조적 갱신을 제안한다. **정현일·박지훈**의 「《경제와사회》 연구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1988~2024)」은 《경제와사회》 1988년 12월 창간호부터 2024년 9월 제143호까지의 기간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과 국문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계급’, ‘정치’, ‘사회운동’이었으며, 시기별로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달랐지만 최근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비판사회학회 회원 인식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비판사회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90명이 응답해 23.9%의 응답률을 보인 이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학술적 의제와 논쟁의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으나 여성 회원들은 ‘남성 연구자 주도의 운영과 페미니스트 시각의 결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비판사회학회 40주년 기념 집담회: 비판사회학회, 성찰과 과제」는 2024년 12월 21일 가톨릭 대학교에서 개최된 집담회를 지상 중계한다. 연구회에서 학회 체제로의 변화가 제도화 이전의 활력을 포기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판사회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주류적·지배적 사회학과의 구별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 면 계속)

이번 호 기획은 ‘12·3 내란과 그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재구성’을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홍성태**의 「**내란사태와 민주주의의 위기구조**」는 12·3 내란 사태가 들추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구조를 논의한다. 저자는 내란사태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어떤 구조적 준비상태에서 촉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87년 체제의 권력구조와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란사태에 투영된 민주주의의 위기구조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탈공고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정당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모순이 민주주의의 탈공고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개혁 없는 개헌으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유현미·김이선·김정환·장진범·박상은**의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약 4개월간 이어진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수집된 1233건의 시민 자유발언문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동시대 시민들의 목소리와 사회적 비전을 탐색한다. 연구진은 단어 빈도 분석, 동시 출현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해 9가지 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연대와 성평등, 민주주의, 노동, 생명안전과 평화의 네 가지 범주로 재구성해 해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광장에서는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와 주도가 두드러졌으며, 시민들이 ‘우리’라는 호명 아래 다층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광장의 경계와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호에는 총 네 편의 **일반논문**을 실었다. **장대업**의 「**동아시아의 초국적 노동 체제와 불균등발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이면에 있는 불균등발전의 현실을 밝히고, 이 불균등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체제들의 위계적 결합이 야기하는 불균등한 노동의 지리에 주목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지역경제에서 불균등한 노동의 지리를 확대·강화하는 동아시아 초국적 노동체제의 구성과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한국 자본의 초국적 노동체제 운영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조혜민**의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스톱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스톱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스톱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등 범죄예방의 한계가 사회적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경호업체는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차별성을 강조해 시장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직접 비용을 지불해 안전을 확보하는 등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이 민간 경호업체로 이양되고 피해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자기통치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비판한다. **송인재**의 「**공간생산의 금융화 와 지역의 환경피해: 인천의 간척사업을 중심으로**」는 인천 송도 간척사업을 사례로 해서 2000년대 이후 공간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화 현상과 그로 인한 지역 환경피해를 분석한다. 저자는 과거 발전국가 주도의 간척사업과 달리 최근에는 국가, 기업과 함께 금융권이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갯벌의 미래 교환가치를 담보로 공간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갯벌의 사용가치는 배제되고 추상화된 교환가치만 남게 되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주민 공동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 면 계속)

남형우·장서현의 「선주민 소득수준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선주 민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큰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한다. 이러한 패턴은 직장 동료, 친구, 결혼 상대라는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호는 두 편의 서평을 실었다. 김원의 「민중기록과 서사」는 김경일의 저서 『민중은 이야기한다: 20세기 한국 민중 서사』 기존의 주류 근대화 서사에서 소외된 기층 민중의 목소리를 전면내 내세워 한국 근대화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술자료 해석 방식과 범주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논점도 제시한다. 그는 민중 서사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며, 한국 사회사 연구에서 민중기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주희의 「매춘여성과 국가: 통치와 방치 사이」는 박정미의 저서 *The State's Sexuality: Prostitution and Postcolonial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매춘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 국가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는 '목인-관리 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가 성매매여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분석한 점에 주목하면서 성산업을 둘러싼 국가 통치성과 젠더 권력에 대한 물음을 촉발하는 이 책이 더 많은 독자에게 읽혀야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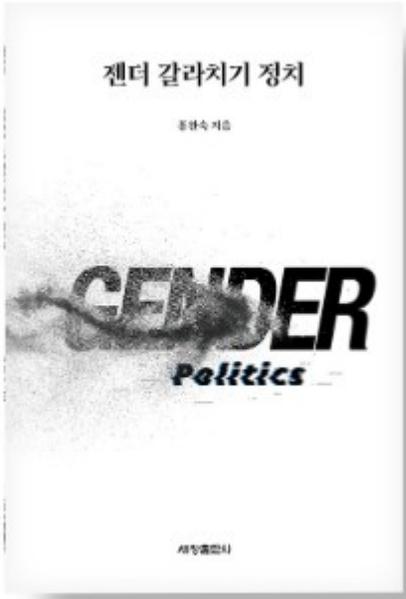
(끝)

<경제와사회>가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
 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신간 및 역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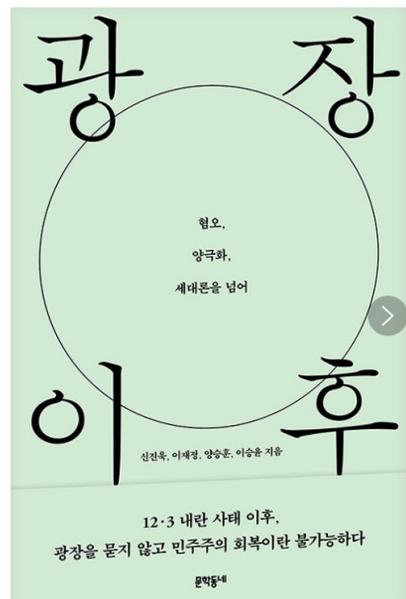
젠더 갈라치기 정치

세창출판사, 2025년 3월, 292쪽

홍찬숙 (서울대학교)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단순한 대립을 넘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이러한 현상의 기원과 작동 방식을 분석하며, 민주주의의 변화 속에서 신자유주의, 공정성 논쟁, 세대 간 갈등, 한국 정치의 변화, 세대와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사회학자 홍찬숙은 한국 사회가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규범적 딜레마를 예리하게 짚어내며, 특히 20대 여성이 새로운 민주화 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목차링크](#)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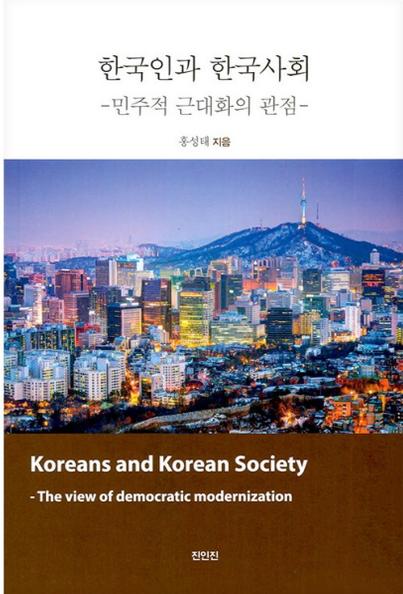
문학동네, 2025년 5월, 232쪽

신진욱(중앙대), 이재정(중앙대), 양승훈(경남대), 이승윤(중앙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광장이 또다시 활짝 열렸다. 이 광장의 시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광장 이후』는 '우리'와 '저들'이라는 편 가르기나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 광장 안팎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던 주체들을 좀더 면밀하게 읽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목차링크](#)

회원 신간 및 역서 소개



한국인과 한국사회: 민주적 근대화의 관점

진인진, 2024년 12월, 333쪽

홍성태 (상지대학교)

이 책은 1894년 동학농민 혁명에서 2024년 12.3 쿠데타에 이르는 기간을 소위 '근대화 과정'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비리 세력의 척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생태복지 국가'로의 전환이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다.

목차링크



한국의 선진화 대전환: 한국 혁신의 정치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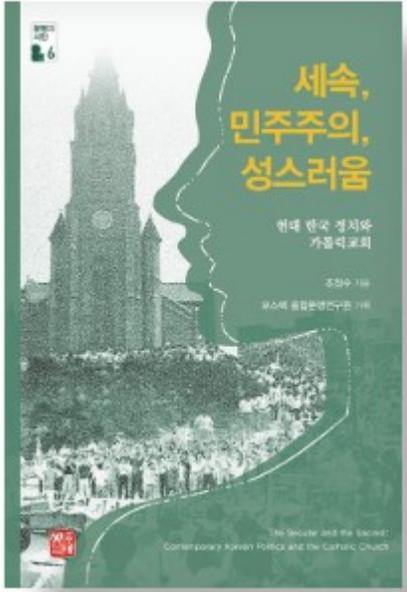
진인진, 2024년 12월, 291쪽

홍성태 (상지대학교)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는 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법원·언론의 '정상화 대전환'이 필요하고 법치와 언론이 바로 서야 비로소 정치 개혁, 정부 개혁, 경제 개혁 등 다양한 사회적 개혁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혁들이 단순한 권력 교체나 개별적 과제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링크

회원 신간 및 역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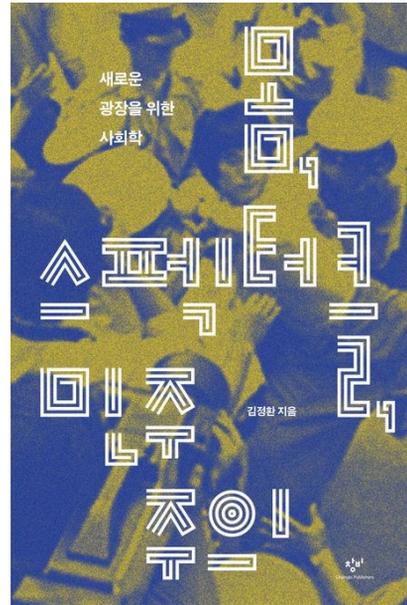
세속, 민주주의, 성스러움: 현대 한국 정치와 가톨릭교회

소명출판, 2025년 3월, 136쪽

조정수 (국립부경대학교)

1945년 해방 이후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부터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 종교 요인은 현대 한국의 정치, 사회 및 문화 변동의 주요한 기제(mechanism)와 변수로 작동해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심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사회학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회운동과 민주화라는 주제에서, 현대 한국 사회 이해의 인식적, 분석적 지평을 종교사회학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목차링크



몸, 스펙터클, 민주주의: 새로운 광장을 위한 사회학

창비, 2025년 6월, 396쪽

김정환 (서울대학교)

다양한 문화현상을 해석해 한국의 현대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 김정환의 첫 책이다. 이 80년대생 사회학자는 80년대 민주주의의 강렬한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지만, 방대한 문화적 자료를 동원해 그 시대를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그렇게 그 시절 이야기를 현재로 소환하면서도, 당사자인 소위 '86세대'가 빠지기 쉬운 역사적 도취를 충분히 경계한다. 민주화의 상징이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영정에서 『소년이 온다』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부셔진 몸들의 이미지를 차분하게 탐색하고, 광장에서 모두가 빛을 발했던 오늘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해서다..

목차링크

신입회원

- 정회원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연구소)
 황현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강명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천용길 (경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회원현황
(5.24 현재)

- 총회원 214명 (정회원 195명 / 특별회원 16명 / 준회원 2명 / 기관회원 1개)
-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4월 18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역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논하다”, 부경대)
- 4월 29일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위한 서명운동 동참
- 4월 30일 제3차 확대운영소위원회 (온라인)
- 5월 24일 제3차 운영위원회 (온라인)
- 6월 4일 제40회 콜로키움 준비회의 (황현일, 박지훈, 이정연, 김정환, 김종훈)
- 6월 24일 제40회 콜로키움 준비회의 (서동진, 황현일, 박지훈, 김종훈)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2025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이항우(충북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부회장 신희주(가톨릭대)
운영위원장 황현일(창원대)	연구위원장 박지훈(부경대)	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
운영위원 강인화(강원대)	운영위원 구은정(동국대)	운영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김란(서울대)	운영위원 김정환(서울대)	운영위원 김주호(국립경상대)
운영위원 박상희(성공회대)	운영위원 박천웅(전북대)	운영위원 박찬중(충남대)
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	운영위원 양승훈(경남대)	운영위원 유현미(창원대)
운영위원 육주원(경북대)	운영위원 이건민(군산대)	운영위원 이도훈(서울대)
운영위원 전용정(국회입법조사처)	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	운영위원 정현일(부산연구원)
운영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운영위원 차유미(한신대)	
운영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추주희(전북대)	
운영위원 홍덕화(충북대)	운영위원 홍성태(창원대)	운영간사 김종훈(서울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부위원장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김도균(제주대)	편집위원 김민정(서울시립대)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김철호(경상국립대)	편집위원 노승미(중앙대)	편집위원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박치현(대구대)	편집위원 서영표(제주대)
편집위원 유성희(한경국립대)	편집위원 이정영(경북대)	편집위원 이현옥(서강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조은주(전북대)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편집위원 김주환(동아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